

News & News

치과의료정책연구소 공식 출범 치협 주요사업 추진 탄력

치협의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1월 4일 개소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으며, 임기 3년의 초대연구소 소장에 김광식 전 치협 부회장이 취임했다.

정책연구소는 이날 '제2차 치과의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후 안성모 협회장, 박종수 대의원총회 의장, 김광식 소장, 김계종 대의원총회 부의장, 고경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소 헌관식을 갖고 정책연구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연구소는 앞으로 해체가 결정된 한국치정회의의 정통성을 이어 받아 그 역할은 물론, 치협과 치과계의 싱크 탱크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

정책연구소는 앞으로 자본금 20억원을 조성하고 치정회비를 승계한 만큼, 연간 많게는 6~7억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해 운영된다.

주요 정책 연구 사업으로 정책연구소는 앞으로 ▲치과의사 인력 수급 문제와 같은 중장기 정책과제를 외부 연구기관에 발주하고 ▲치협 내 각 위원회에서 필요한 정책 과제를 생산하며 ▲치협의 현안 과제 중심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게 된다.

또 정책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등 정책 개발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회원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국내외 치과의료와 관련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치과의료 통계연보 발간도 추진한다.

정책연구소의 연구 과제는 주로 외주 위탁 방식으로 운영된다.

치과의사 인력 수급이나 치과 건강보험 관련 연구 등 주요 연구 과제는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주로 보건사회연구원 등 외부 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정책연구소는 크게 연구기획·평가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된다.

연구기획·평가위는 기획, 보험, 치무, 법제, 경영정책 이사 등 치협 정책 관련 주요이사와 법조계, 연구계, 학계, 개원가 대표 등 10여명으로 구성, 연구사업·계획수립·예산안 작성 → 연구과제 선정발주 → 연구과제 종료 후 평가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연구소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명망있는 치과계 인사로 구성될 예정이다.

사실상 치정회 기능을 흡수한 역할을 담당, 치협 정책 추진이 원활히 완수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게 된다.

정책연구소는 올해 추진 사업 1순위로 구강보건 전담부서 확대 개편으로 확정, 새 정부에 제출할 정책 제안 보고서 마련 등을 통해 치협 활동을 측면 지원할 예정이다.

News & News

치과의료정책관 설치 총력전 치과계 정책 알리는 움직임 활발

보건복지부내 치과의료정책관 설치를 위한 치협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치협은 최근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여 위원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치과의료 발전 방향과 치과의료정책관실 설치의 당위성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가능한 모든 경로를 동원해 치과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계획.

치과의료 정책의 중요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드리는 치과의료 정책 제안서'를 발간한 치협은 1월 10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를 완료했다.

또 치과계와 각 단체의 장들이 참석하는 '보건복지부 치과의료정책관 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추진위에는 치협에서 안성모 협회장, 이수구 부회장 및 기공사협회, 치위생사협회, 구강보건협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병원협회, 치과기재협회, 각 단체장 등이 포함돼 있다.

치협은 이날 회의에서 인수위 참여 위원 분석을 통해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치과의료정책관 설치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추진위는 인수위원회에 치과계의 의지를 피력할 수 있는 인

사를 추진위의 고문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치협은 아울러 1월 10일 의협, 한의협 등 의료계 3단체 정책 추진 이사와 복지부 실무 책임자들 간의 비공식 회의에도 참석, 치과의료 정책관실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치협은 보건의료분야 발전과 관련된 정책은 의료계 3단체 공조를 통해 인수위에 적극 제안 하는 것도 강구중이다.

한편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 일단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 전인 2월 20일 이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정부조직의 새 틀을 완료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교육부와 과기부 통합이나 여성부와 복지부 통합 등 큰 틀만 마련하는 만큼, 치과의료정책관 설치문제는 이 당선자 취임 후인 2월 25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치협은 치과의료정책관 설치문제는 대통령 취임 후 결정 되더라도 사전에 인수위 쪽에 치과 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으면 힘들다고 판단, 구정 전까지 치과계 정책 알리기에 총력전을 펴겠다는 각오다.

News
& News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하자” 새해 첫 치협 정기이사회

무자년 새해 첫 치협 정기이사회가 개최됐다.

치협은 1월 15일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대회의실에서 제9회 정기이사회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1월 10일 치러진 치과의사전문임제 1차 필기시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철수 법제이사과 박영국 수련고시이사는 시험결과를 보고하고, 2차 실기시험이 마무리될 때까지 잡음이 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요 토의안건으로 논의된 예산심의소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4명과 학술담당 부회장, 총무, 재무, 공보이사 등을 위원으로 선임, 구성키로 결의했다.

협회대상(공로상, 학술상) 및 신인 학술상, 치과의료문화·봉사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 구성도 확정, 회장단을 비롯한 관련 주무이사들이 위원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지난해 의료법 개정 저지 등을 위해 각 지부에서 기금 등을 기탁했으나, 별도의 규정이 없어 성금 관리가 다소 미흡했다는 판단 하에 성금관리규정을 제정하려 했으

나, 보다 각각적인 의견 조율을 위해 차기 정기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올해 4월 개최되는 대의원총회 대의원수 배정도 확정됐다. 총 18개 지부 회원수 대비로 산출되는 대의원수는 총 201명. 서울·전남·군진지부가 전년 대비 1명씩 감소한 가운데 경기지부는 1명, 공직지부는 2명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치의신보 회수 불가 미수금 대손처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치의신보는 지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누적돼 온 악성 미수금 4천6백53만원을 털어내게 됐다.

이밖에 사무처 직제규정 개정의 건도 통과돼, 기존에 ‘업무국’을 ‘정책국’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기획관리실, 총무국, 정책국, 학술국, 보험국, 홍보국으로 구성되는 기존의 1실 5국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안성모 협회장은 “무자년 새해에는 치과계에 더욱 좋은 일들만 있길 바라며 임기 마지막까지 더욱 최선을 다해줄 것 당부한다”고 말했다.

News
& News

“신의료기술 개발치고항목 늘려야” 보험·연구위원회, 보험현안관련 논의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강보험에서의 치과 파이를 늘리기 위해 신의료기술 항목에 활발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신의료기술 관련 신청이 의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상황을 감안할 때 치협에서 주도적으로 신의료기술 항목을 개발하고 이를 등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전략도 제시됐다.

보험위원회(위원장 김영주)·건강보험연구위원회(위원장 김재영)는 1월 16일 치협 회관에서 보험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이같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재천 위원은 “건강보험의 치과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을 얼마나 개발하고 보험 급여로 등재시키느냐가 중요하다”며 “개인적으로 신의료기술을 신청해 보니 논문을 쓰는 것보다 어려울 정도다. 보험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도 적어서 일선 개원의로서(솔직히) 등골이 빠질 정도다. 치협이 지원하는 시스템 등을 도입하든지 정책적인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치과 분야에서 신의료기술 항목 신청이(의과와 비교하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치협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치협에서 투자를 하고 키워나가는 것도 맞는 의견이다. 각 분과학회에서 의지를 갖고 신의료기술을 정리해 치과 항목을 늘려나가야 한다. 앞으로 전향적으로 다른

각도로 치과보험을 늘리기 위한 시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의료기술 항목으로서 그동안 행위에 들어가지만 코드에 들어가지 않은 항목들의 경우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된 것들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항목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경우 신의료기술의 항목도 급여 항목으로 재편될 경우 상대가치점수의 총점고정 원칙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쉽지 않은 양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대해 논의, 상대가치점수가 총점고정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조정이 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울러 유형별 환산지수, 치과의원의 부당청구 사례, 치위생사 부족, 치석제거 보험화 등과 관련한 현안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김영주 보험이사는 “올해가 건강보험 30주년인데(그동안 영결결에 당하고, 알면서도 당하고) 잘못 시행되던 제도들이 고착화되고 굳어져 바꾸기가 매우 어려웠다”며 “참여정부에서는 레진 급여화, 노인틀니 급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임플란트로 인해 강력한 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했다.